

# 대통령의 방위비증액 지시 철회돼야

## 방위비삭감연대모임, '인간안보' 실현 촉구

95. 9. 15



지난달 28일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기 진작을 위해 96년도 방위예산을 10%이상 증액할 것을 지시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 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 평화연구원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은 28일 96년도 방위예산을 한자리수에 구애받지 말고 증액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모임은 성명소를 통해 "문민정부를 자칭하는 김영삼정부가 그간의 시민운동차원의 요구를 의견수렴 절차조차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인 지시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때 민족통일의

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냈다.

연대모임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군의 사기 저하는 일부 정치군인들의 행태와 무기수입비리로 인한 군위 위상 실추, 과도한 무기구입비 지출로 인한 군의 열악한 복지상태에서 출발"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기수입비를 줄여 군의 복지증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인 군사기 진작방안"이라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또 "과중한 국방비 편성과

대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이번 지시가 총체적이고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요구하

집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희생당하고 있다"면서 "96년도 방위비를 10% 이상 증액하라는 지시는 철회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방위비를 삭감해 현재 6.38%에 불과한 사회복지비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방위비 삭감을 위한 일반인 엽서보내기운동'에 시민 참여 5천명 넘어

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

이어 연대모임은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할 '인재에 의한 대형참사' 보상이 매년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인간안보'가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96년도 방위비 삭감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던 연대모임은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내는 방위비 삭감을 위한 일반인 엽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천명 이상이 참가한 엽서보내기운동은 1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로 확대될 예정이다.